

 <p>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</p>	<h1>보도자료</h1>	2017. 3. 31(금)	
		작성문의	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과 과장 장원석 / 팀장 전정관 (Tel. 044-200-2850)
* 엠바고 : 3.31(금) 17:00(행사종료) 이후 사용			

갈등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

- 국무총리 자문 시민사회발전위원회 개최, 보수·진보·중도를 아우르는 14개 단체 공동 주관

< 주요내용 >

- 국무총리 자문 시민사회발전위원회(위원장: 김영래 아주대 명예교수)는 3월 31일(금) 오후 바비엡 교육센터(서울 중구 소재)에서 「시민사회 발전 및 사회통합을 위한 대토론회」를 개최함
- 제2기('15.8.26~'17.8.25)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활동성과를 정리하고 공유하는 한편, 우리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을 이루기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됨
- 토론회는 국내 시민사회를 대표하고 보수·진보·중도를 아우르는 14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였으며,
 - * △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, △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, △바른사회시민회의, △북한민주화네트워크, △소비자시민모임 등
- 현재 한국 시민사회가 안고 있는 4개의 주요 현안과제*들을 대상으로 세부 패널토론을 진행함
 - * △한국사회 진단과 사회통합, △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제도 합리화, △시민교육 제도화, △정부-시민사회 간 거버넌스 구축
- 김영래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장은 보다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시민사회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중요하게 될 것이며,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협력이 선진사회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강조

□ 국무총리 자문 시민사회발전위원회(위원장: 김영래 아주대 명예교수)는 3월 31일(금) 오후 바비엡 교육센터(서울 중구 소재)에서 「시민사회 발전 및 사회통합을 위한 대토론회」를 개최하였다.

○ 이날 행사는 '15년 8월 출범한 제2기('15.8.26~'17.8.25) 시민사회발전 위원회의 활동성과를 정리하고 공유하는 한편,

○ 우리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을 이루기 위한 시민 사회의 역할과 책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* 참석 : 시민사회단체 활동가, 학계·연구계, 시민사회발전위 위원 등 100여명

○ 이날 토론회는 최근 일련의 사태로 인해 국론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은 가운데, 시민사회 스스로가 국민통합을 위한 구체적 행동에 나섰다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.

□ 토론회는 국내 시민사회를 대표하는, 보수·진보·중도를 아우르는 14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였으며,

○ 이는 시민사회 전체가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함께 공유하고, 국민통합을 위해 소통과 협력을 모색한다는 의미가 있다.

< 공동주관 단체, 14개 >

△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△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△바른사회시민회의 △북한 민주화네트워크 △소비자시민모임 △시대정신 △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△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△초록우산어린이재단 △한국여성단체협의회 △한국YMCA전국연맹 △한국YWCA연합회 △환경운동연합 △흥사단 (가나다 順)

□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한국 시민사회가 안고 있는 4개의 주요 현안과제들을 대상으로 세부 패널토론을 진행하였다.

○ '한국사회 진단과 사회통합' 패널에서는 보수¹⁾와 진보²⁾ 양측의 시각에서 현 우리사회를 진단하고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전망해 보았으며,

* 1) : 이재교 시대정신 대표, 2) 박재묵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

- 이를 바탕으로 사회통합을 위한 개선방향과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였다.
- '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제도 합리화', '시민교육 제도화' 및 '정부-시민사회 간 거버넌스 구축' 패널에서는
 - 각각 선진 해외사례 및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사례에 대한 분석 등을 토대로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 및 정책과제에 대한 토론을 이어 나갔다.
- 김영래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장(아주대 명예교수)은 인사말을 통해,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으고, 수많은 난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지혜가 절실한 상황임을 지적하고,
 - 앞으로 우리나라가 보다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시민사회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중요하게 될 것이며,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협력이 선진사회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.

<붙임> 시민사회발전위원회 개요

□ 목적 및 근거

- 시민사회 발전 및 정부-시민사회 간 소통·협력을 위해 「시민사회발전위원회규정」(국무총리훈령)에 의해 설치('13.6월)된 국무총리 자문위원회

□ 구성

- 위원은 보수·중도·진보를 아우르는 시민사회 단체의 대표급 인사 및 학계 명망가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(위원장 포함 18인, 임기 2년)
- 위원장(김영래 아주대 명예교수)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
-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4개 분과위원회* 구성('16.2.26)

* ① 정부-시민사회 간 거버넌스 구축, ② 시민사회 내부 갈등 해소, ③ 시민교육 제도화, ④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제도 합리화

□ 기능 : 다음 사항을 심의

-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
-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제정·정비
- 시민사회단체의 활성화

□ 운영

- 전체위원회 : 매분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현안발생 시 수시 개최
- 분과위 : 매월 개최하여 상시 운영체계 구축 추진

□ 활동실적

- 1기('13.6.20~'15.6.19) : 총 17회 회의 개최(전체위 10회, 분과위 7회)
- 2기('15.8.26~'17.8.25) : 총 20회 회의 개최(전체위 7회, 분과위 13회)

□ 위원 명단

성 명	소 속 단 체	직 위
권 도 엽	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	공동대표
김 석 우	21세기국가발전연구원	원장
김 영 래 (위원장)	아주대학교	명예교수
김 자 혜	소비자시민모임	회장
문 영 기	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	前 회장
박 재 목	환경운동연합	공동대표
이 명 혜	한국YWCA연합회	회장
이 윤 배	흥사단	前 이사장
이 재 교	시 대 정 신	대표
이 제 훈	초록우산 어린이재단	회장
이 총 재	한국YMCA전국연맹	사무총장
임 현 진	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	前 공동대표
장 수 찬	한국NGO학회	前 회장
정 문 자	한국여성단체연합	前 공동대표
조 동 근	바른사회시민회의	공동대표
최 금 숙	한국여성단체협의회	회장
하 태 훈	참여연대	공동대표
한 기 흥	북한민주화네트워크	대표